

03 _ 합의회의의 국내사례들 - ② 생명복제기술

1999년 '생명복제기술 합의회의'

“인간개체복제 및 인간배아복제 금지” 합의

글 | 김은영 _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팀 heidi@unesco.or.kr

‘유전자 조작식품의 안전성과 생명윤리’ 다음으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선택한 합의회의의 주제는 ‘생명복제기술’이었다. 1997년 영국에서 탄생한 복제양 돌리는 세계적 관심사가 되었으며, 당시 우리 나라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사람들은 복제양 돌리의 탄생으로부터 인간복제 가능성을 점쳤고, 공상과학영화의 소재로 여겨졌던 일이 현실로 한걸음 다가왔다며 흥분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인간 존엄성이나 동물복제의 윤리와 안전 등 생명복제기술과 관련된 쟁점들은 부각되지 않았다. 합의회의의 사무국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이 주제를 다루어 자연스럽게 생명윤리 전반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고,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시민의 여론 형성과 선택 능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두 차례 예비모임 통해 시민패널 기초지식 교육

합의회의의 주제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1999년 4월 16일에 ‘생명복제기술에 관한 합의회의의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황우석 당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와 진교훈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가 생명복제기술의 현황과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해 발표하였고, 이 자리에서 합의회의의 추진 계획을 논의하였다.

1차 합의회의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김환석 국민대 교수가 책임을 맡아 전체 운영을 주관하기로 하였다. 또 합의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과학자, 윤리학자, 관련 단체 및 기관, 시민단체, 언론계를 아우르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서울대 노현모, 진교훈 교수, 과학기술평가원 장문호 원장, 참여연대 박상중 공동대표, 한국과학문화재단 조규하 이사장, 과학기자클럽 김훈기 기자가 조정위원회에 참여하였다. 조정위원회는 주제 선정, 합의회의의 일정 승인, 시민패널 선정, 전문가 패널 선정 등을 위해 합의회의의 추진과정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제 합의회의의 핵심인 시민패널을 선정할 차례가 되었다. 신문과 방송, PC통신 등에 모집 공고를 낸 결과, 서울을 비롯해 인천, 부천, 수원, 고양 등 경기도뿐 아니라 부산, 대구, 원주, 철원, 광주, 완주, 청주 등 전국 각지에서 88명이 신청하였다.

지원자는 20대 대학생이 제일 많았고, 60대 지원자도 있었다. 대학강사, 의사, 교사, 대학(원)생, 주부, 회사원, 자영업자부터 시민단체 상근자, 만화가, 시의원, 실업자 등 다양한 시민들이 지원하였다. 이중 조정위원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남녀 각각 8명을 시민패널로 선정하였다(20대 3명, 30대 5명, 40대 5명, 50대 2명). 시민패널들은 본회의의 전인 7월 10일과 8월 7일에 두 차례 예비모임을 통해 합의회의의 진행방식을 이해하고, 생명복제기술에 대한 기초지식을 교육받았다.

7월 10일 송실대 사회봉사관에서 열린 1차 예비모임에서는 생명복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는 생명복제의 기본개념과 잠재적 이익에 대해서, 홍욱희 세민환경연구소장은 생물학의 기본개념과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한여름 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민패널들은 각각의 발표에 대해 1시간 넘게 질의응답을 통해 생명복제기술의 이익과 위험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는 생명복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적절한 규제와 원칙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생명복제기술의 개발에는 찬성하지만 인간복제는 절대 반대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과학자들의 생명복제기술 개발의 출발점은 호기심이며, 잠재적 위험을 모르기 때문에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실험을 해보아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예비모임 첫날 보통시민 16명이 모였다. 회의 진행과정을 듣고 있는 시민패널들



전문가들의 발표를 듣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 시민패널들

또 홍욱희 소장은 생명복제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즉 법 제정 등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질의응답을 마치고 시민패널들은 2시간 넘게 이어진 자유토론을 통해 주요 질문을 선정하였다.

8월 7일 유네스코회관에서 열린 2차 예비모임에서는 좀더 구체화된 주제를 다루었다. 서정선 서울대 의대 교수가 생명복제기술의 의학적·의료적 이점을, 박은정 서울대 법대 교수가 생명복제기술의 법적·윤리적 쟁점에 대해 발표하였다.

서정선 교수는 수정된 후 원시선이 생기기 전인 14일까지 배아는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가 가능하므로 연구를 허용하고, 14일 이후의 배아연구는 금지하고 자궁이식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박은정 교수는 생명에 관해서는 전통적으로 윤리가 담당해 왔으나 이제 윤리만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 합리적인 토론 절차를 거쳐 적절한 법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 법은 무의미하므로, 법을 만들기 전에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준 전문가 수준에 오른 시민패널들 활발한 토의

두 번의 예비모임에서 토론을 통해 시민패널들은 10개의 주요 질문과 35개의 세부질문을 준비하였다. 시민패널들은 미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9월 4일에 3차 예비모임을 갖는 열성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토론의 사회적 선정에까지 신경을 썼다. 주최측에서 사회를 볼 경우 주최측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있기 때문

에 시민패널 중에서 사회를 맡자고 의견을 나누었다. 7월부터 9월 까지 3차에 걸친 예비모임을 하면서 시민패널들은 그 동안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3차 모임에서 시민패널들은 개인적 생각을 나누었다.

“생명복제가 발전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고 그것이 발전할 것이라면, 우리가 잘 알아서 이용을 해야겠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개인적 바람은 생명복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낭만적인 생각이다.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정도로 발전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모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중립적 입장이다. 경제적인 문제나 장기 제공 등에서는 어느 정도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분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어쩔 수 없다는 일종의 패배감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은 동물복제를 포함한 모든 생명복제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굳혔다.”

“처음에는 반대 의견이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무조건적인 반대는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패널이 본회의를 앞두고 주요 질문 10가지를 최종 선정했고, 이에 대답할 전문가 패널 11명이 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성되었다.

드디어 9월 10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강당에서 생명복제기술 합의회 본회의가 시작되었다. 권태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의 인사말에 이어 박익수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유성희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축사를 통해 합의회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 후 시민패널의 질문에 대한 11명의 전문가의 답변이 하루 중 일 이어졌다. 예비모임에도 참여했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생명복제기술의 현황을, 박세필 마리아 불임클리닉 연구소장이 생명복제기술의 의학적·의료적 효능을, 이정배 감신대 교수가 생명복제에 대한 종교적·신학적 입장에 대해, 조정위원인 진교훈 교수가 생명복제에 대한 윤리적·사회적 고찰을, 김용정 과학사상 편집인은 생명의 출발점에 대해 발표하였다.

점심 식사 후에는 극단 연우무대에서 합의회의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연극 'A.D. 2031 제3의 날들' 중 제4장을 잠깐 공연하였다. 연극의 내용이 분위기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시민패널의 의견도 있었으나 대다수는 시간도 짧고 잠시 휴식을 취하며 보는 것이라 괜찮을 것이라며 연극 공연에 동의하였다. 한편 회의장 안팎에서는 생명복제를 주장하는 한 단체가 피켓팅을 하면서 회의장 분위기를 한때 긴장시키기도 하였다.

그 뒤 계속해서 황상의 서울의대 교수가 생명복제기술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손 민 김&장 법률사무소 변리사가 특허에 대해, 김부년 국회 입법조사관이 법적 대응에 대해, 홍옥희 세민환경연구소장이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방안을, 송상용 한림대 교수가 생명윤리 전반에 대해, 마지막으로 손명세 연세대 의대 교수가 의과대학에서의 생명의료윤리교육 현황과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시민패널만 진지한 것이 아니었다. 전문가패널의 열성도 이에 못지않았다. 자신들의 견해를 이해시키기 위해 식사 시간까지 할애하면서 시민패널들과 토론하는 모습을 회의장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었다.



시민패널 보고서를 마무리중인 시민패널들



본회의의 마지막날 '시민패널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 시민패널 대표

사회적 합의 도출 위해 종교계의 역할 요청하기도

다음날 9월 11일, 토요일 오후 내내 다시 전문가 패널을 모시고 전날의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였다. 시민패널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질문에 대해 보고서를 쓰기 위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대답을 들었다. 그 뒤 조별토의와 전체회의를 진행하면서 시민패널들은 12일 일요일 연세대 상남경영관에서 종일 함께 숙식하면서 10가지 질문에 대한 보고서를 밤을 새워가며 작성하였다. 시민패널들은 이제 더 이상 일반 시민이 아니었다. 그들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화된 시민'이었다.

본회의의 마지막 날 시민패널들은 그 동안 듣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결론을 발표하였다. 9월 13일 오전 10시, 언론사 기자를 비롯해 정부 담당자, 시민사회단체 인사, 생명공학 전문가 그리고 일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패널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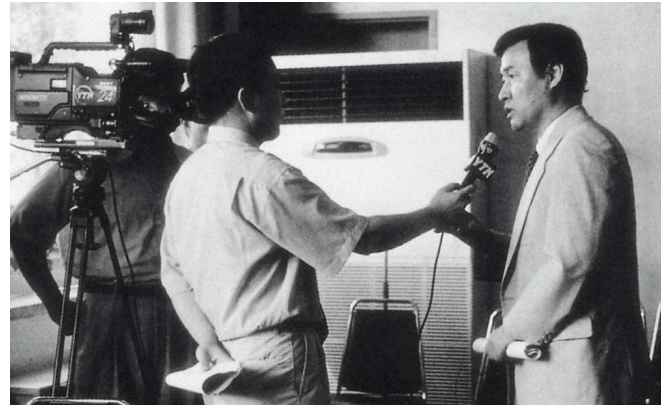
시민패널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시민으로서 생명

시민패널 주요 질문

1. 생명복제기술이란?
2. 생명복제기술의 이점은 무엇인가?
3. 생명복제기술의 문제점
4. 생명의 출발점은?
5. 생명복제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6. 생명복제기술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7. 생명복제기술에 대한 국내외의 규제 동향
8.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현황 그리고 방안
9. 학교교육과 시민교육을 통한 생명윤리 교육방안
10. 생명복제기술에 있어 종교계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본회의에서 시민패널들이 생명복제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자 이에 대해 기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합의회의와 관련한 TV 인터뷰

복제기술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당당히 발표하였다. 물론 많지 않은 16명의 시민이었지만 이 보고서를 내기 위해 합의하기는 쉽지 않았다. 인간개체복제는 만장일치로 합의하였으나, 의료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배아복제는 2명이 찬성하고 14명이 반

대하여 배아복제 금지에 합의하였다(시민패널은 4/5인 13명이 동의할 경우 합의한 것으로 보았다). 동물복제까지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6명이 있었다. 시민패널은 생명복제기술과 관련되어 시민 참여의 필요성과 생명윤리 의식 향상을 위해 학교교육과 시민교육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연구에 참가하는 과학자의 지속적인 재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종교계의 역할을 요청한 게 눈에 띈다.

생명복제기술합의회의 시민패널 보고서 주요 내용

(중략)

우리 시민패널 16명은 생명복제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에 비해 그에 대한 잠재적 위험의 대중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허용한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규제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번 합의회의에 참여했다.

우리가 이번 합의회의에서 생명복제기술의 논란과 관련된 전문가 패널의 강의를 듣고 수많은 토론과 조정의 산고를 거치면서 5번 이상의 수정과정을 통해 합의한 결론은, 현대계에서 체세포복제기술을 이용한 인간복제시도는 물론이고 인간 배아복제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생명복제기술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두 번의 예비모임과 3박4일의 짧은 기간 동안 배우고 토론하면서 만들어진 이 보고서가 완벽한 것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고서가 현재의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건강한 시민의식과 보통의 상식에 기반하여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지 않으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낸 결과물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번 합의회의의 성과물이 생명복제기술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보탬이 되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중략)

3개월에 걸친 시민패널의 활동은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시민패널 보고서'는 기자회견 후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후원기관에 전달되었고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합의회의의 결론은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아 거의 모든 일간지에 보도되었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에도 인터뷰 및 토론 프로그램으로 다루어졌다. 보도의 초점은 인간 복제 찬성 여부 등 흥미기사 중심에서 14일 이내 배아복제의 허용 여부 등 심층적이고 복합적인 쟁점들로 옮겨갔다. 합의회의가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성숙한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준 예라 할 수 있다.

합의회의 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아복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시민패널 보고서를 다시 펼쳐 보면서 그때 시민들이 합의한 내용과 주장의 깊이에 놀라면서, 아직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사회의 분위기를 발견하게 된다. 여전히 시민들이 참여할 공간은 크지 않은 듯하다. ㉓



글쓴이는 서울대 생물학과 졸업 후 환경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